

‘하와이 가는 LCC’... 대형기종 띄워 중장거리 개척

비상하는 LCC

진에어

상반기 매출 첫 5000억 돌파
‘393석 대형기종’ 탄력적 운영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매출 2위인 진에어는 올해 상반기 동안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진에어는 올해 노선 수요에 맞춘 탄력적 기재 운영을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경쟁 LCC와 달리 중장거리 노선을 강화하고 있어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계열인 진에어는 대형기종에 속하는 B777-200ER(393석)을 도입, 업계 최초로 미국 하와이에 비행기를 띄웠다. 기존 LCC들



진에어 항공기.

이 멀어서 가지 못했던 노선들에 항공기를 투입하면서 차별화를 꾀한 것. 이를 통해 각 노선별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석 조절 및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운수권으로 인해 증편이 어려운 노선일 경우 B777-200ER 항공기를 투입하면 B737-800 2대를 운영하는 효과

(공급석 확대)를 얻어 수익 극대화를 꾀할 수 있다. B777-200ER(좌석수: 393석) 항공기의 특징은 기존 LCC가 주로 운용하는 B737-800(좌석수: 189석) 항공기와 비교해 두 배 이상의 좌석 공급이 가능하다.

진에어는 지난 6월 신규취항한 조호바루 노선의 탑승률이 최근 80%에 육박하

는 등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자 연중 운항을 결정하기도 했다. 수요에 따라 B777과 B737을 교대로 투입, 공급량을 조절해 수익성을 높일 것인 전략이다. 여기에는 조호바루에서 육로이동이 가능한 싱가포르에 비행기를 띄우는 LCC가 없어 대체노선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하지만 진에어는 올해 잇따른 악재로 올해 초 수립했던 사업 목표 달성은 힘들게 됐다. 특히 국토부의 제재조치로 항공사 수익과 직결되는 사업 확장 제한과 신규 항공기 도입에 차질이 발생했다. 면허 취소는 간신히 면했지만 영업활동에 지장은 불가피해진 것이다.

진에어가 신규 항공기 도입 불가와 노선을 배분받지 않더라도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빠르게 추격해오는 티웨이항공에 2위 자리를 내줄 수 있다. 현재 진에어의 국제선 노선수는 30개 수준이지만 티웨이항공은 40개를 넘어선 상태다.

또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수 없다는 점도 악재로 작용한다. 진에어가 연말까지 항공기 26대로 영업을 해야 하는 반면, 제주항공은 현재 37대인 항공기 보유 대수를 올해 말 39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진에어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티웨이항공은 연말까지 항공기 24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진에어와의 차이도 2대로 좁혀질 전망이다.

다만 티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가 미국 보잉사의 B737-800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을 수 있다. 해당 기종은 진에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장거리 노선에 투입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이 신규 항공기를 도입해도 단순 좌석수만 놓고 보면 여전히 격차가 있다”며 “국토부에 제출한 경영문화 개선 대책을 이행할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는 신규 항공기 도입과 노선 신설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외국인, 韓 채권 9개월 만에 순매도

1.9조 순유출... 잔고 112조620억원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도 이어지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종지부를 찍고 지난달 채권 시장에선 9개월 만에 자금이 빠져나갔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인 순매도 2조324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4조2000억원 규모의 만기상환으로 총 1조9120억원이 순유출됐다. 순유출을 기록한 것은 작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보유잔고도 112조62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1조1000억원), 유럽(-8000억원)에서, 종류별로는 국채(-2조1000억원) 및 회사채(-1000억원)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의 순유출 규모가 3조5000억원으로 컸다.

한국과 미국의 시장금리는 올 1월부터, 기준금리는 지난 3월부터 역전됐지만 외국인은 계속 한국 채권을 사들였다. 원화가 강세(환율 하락)를 보이면서 외환 거래에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탓이다.

그러나 이젠 상황이 좀 달라졌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환율이 급등(원화 약세)했다. 더 이상 환율 덕을 보기도 어렵게 된 셈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주 청소년 밀착상담 자살률 ‘제로’

>> 1면 ‘...2만명이 자살위험군’서 계속

청소년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전국 4위)는 10대 자살 예방을 위해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등굣길 캠페인, 우울 타파 자살 예방 프로그램, 마음성장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 온 제주도는 3년째 자살률 제로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센터의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가 상담한 학생은 1513명, 심층평가한 학생은 1514명에 달했다.

도 교육청은 전문의 상담 이후 ‘혼디거

아직 정부의 시각은 부정적이지 않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2일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내외금리차의 역전 폭이 확대되면 환율상승으로 이어져 대내외 건전성이 취약한 국가 위주로 외국인 채권자금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외국인 채권자금 중 상당부분을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안정적인 투자행태를 보이는 공공부문 투자자가 보유 중이며, 아직 내외 금리차와 스왑레이트를 함께 고려한 차익거래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는 1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대로라면 연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지만 1%포인트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격차다.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일부 발을 빼기 시작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중 외국인인 순매도 5800억원을 순매수했다. 매수 기조는 이어졌지만 전월 1조1000억원 대비로는 매수 규모가 크게 줄었고, 이달은 대규모 매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안상미 기자 smahn1@

넬름’을 통해 위기 학생의 문제행동 원인에 따른 맞춤형 통합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에서 제주 학생들의 건강만족도는 2015년 7.49에서 지난해 7.75를 기록하며 전국 1위로 등극했다. 삶의 만족도도 2년 만에 전국 최고로 나타났다.

권일남 교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 터놓고 대화할 상대이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 생명존중가’를 발굴해 아이들끼리 서로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놓고 ‘살바싸움’

한경연 “소상공인 구성비율 90%는 돼야 대기업에 해제심의 요청권한 부여”

올해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적합업종 특별법)을 놓고 대·중소기업간 팽팽한 줄다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붙은 대기업편에서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먼저 당겼다.

한경연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건의서’를 15일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지난 6월 12일 국회를 통과한 적합업종 특별법의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이자 의견수렴 마지막 날이기도 하다.

한경연은 우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이 가능한 단체를 ‘소상공인 구성 비율 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 필요성이 시급한 경우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다소 낮춰 75%까지 적용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청자격 소상공인 단체 기준은 회원사가 10~50개사인 단체의 경우 ‘소상공인 10개사’ 또는 ‘소상공인 비율 3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단체 규모에 따른 소상공인 회원수는 다소 다르지만 비율은 모두 3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 단체엔 소상공인, 소기업, 중소기업 등이 혼재돼 있을 수 있어 소상공인 비율을 높여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남발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게 한경연의 주장인 셈이다.

NH투자증권, 기준금리 1.75%로 인상 전망

NH투자증권은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0%에서 연 1.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강승원 연구원은 15일 “9월 물가 서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안) 개선과제〉

분야	시행령(안)	개선안	
신청요건	신청단체 소상공인 구성비율	30%	90%
	신청서류 제출*	제출의무 無	제출의무화
심의위원회	의결기준	과반출석·과반찬성	재적의원 2/3 찬성
	구성요건(대면단체·법인 정의)	중기부장관 고려	재량남용 방지조치 필요
대기업 권한	지정해제요구권	중기부장관만 有	대기업 부여
	지정 신청자료 공개요구권	無	대기업 부여

*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만료 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의 경우.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특히 2011~2012년 당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때문에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린 뼈아픈 기억이 있어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이라도 중소기업들 입김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게 주장의 속뜻이다.

한경연은 또 대기업 단체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의 해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주장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은 소상공인단체가, 추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은 중기부가 각각 할 수 있고 해제 심의 중기부 장관만이 심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한경연은 이에 대해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주고 기업들에게는 부여하지 않으면 대외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어 산업경쟁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목 상권 보호라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명분을 들며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편을 들 가능성이 높은 중기부 장관에게만 해제 심의 요청권을 쥐선 않겠다는 게 대기업의 주장이다.

한경연은 심의위원회 의결 요건도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대로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더 많은 생계형 적합업종이 심의를 통과하고, 대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총 15명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중기부 장관 추천 공익위원 5명, 동반위 추천 2명,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대면 단체(법인) 추천 2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 내 위원이 적게는 2명에서 중견기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4명에 불과, 상대적으로 포대결에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의결 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이날까지 관련법을 입법예고한 중기부는 단체 등으로 수렴한 의견을 정리해 빠르면 이달 중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접수할 예정이다. 규제위를 통과한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 말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 12월 13일 본격 시행된다.

/김승호 기자 bada@

면서 시장 초점은 ‘당분간 금리인상은 없다’에 맞춰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에 인상 이후 단기금리는 하락 시도가 예상된다”면서 “만약 10월 금융위에서 금리인상이 단행되지 않더라도 11월 금리인상 신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